

與 광주의원들 “아특별법 조속 처리해 아시아전당 정상화해야”

“국책사업으로 본래 목적대로 추진돼야...정쟁 도구 안돼”

“광주가 제2의 지역구라던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해야”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지역 의원들은 14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책사업으로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돼야 하므로 이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아특별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병훈·양향자·송갑석·이형석·민형배·이용빈·조오섭·윤영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약 이번 회기 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안 될 경우 아시아문화전당은 운영에 커다란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은 광주에 소재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문화공간이자 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연구 플랫폼”이라며 “그러나 개관하기도 전인 2015년에 아시아문화전당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

을 골자로 한 아특별법이 개정돼 운영에 많은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바로잡고자 이병훈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월12일 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만약 이 법이 올해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아시아문화전당은 2015년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당초 국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상실하고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근 광주를 제2지역구로 두겠다고 선언했는데 광주를 지역구로 둔 우리는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며 “국민의힘이 광주 시민의 오랜 숙원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아특별법 개정안의 회기 내 국회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왼쪽 네번째) 의원을 비롯한 광주지역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형배, 이용빈, 이형석, 이병훈, 양향자, 조오섭, 윤영덕 의원.

주호영 “역대 최악의 국감...與, 정권에 불리한 건 무조건 채택 거부 방탄 국감”

“유티머스 사태, 특검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 대해 “역대 국감 중에 최악의 국감”이라며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에 불리한 것은 무조건 채택을 거부하기 때문에 방탄 국감이고 정권을 옹호하는 국감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법상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의 감시, 견제라고 돼있는데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중요 증인 채택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왜 정책감사를 안 하고 실정 추궁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냐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책 질의는 국정감사가 아닐 때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실정을 집중 추궁하는 게 감사가 맞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여론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인·유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사모펀드 모집 과정이나 그 이후에 정권의 실체들이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전과진흥원, 농어촌공사 또 농협의 NH투자증권 등 5개의 공공기관이 무려



828억원을 투자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쉽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려면 정권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비호하고 수사를 망쳤던 추미에, 이성윤에게 맡겨두서는 논란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성하는 특별수사단에 맡기든지 아니면 특검을 해서 밝혀져야 국민들이 신뢰를 할 것”이라며 “심판과 선수가 한 편인데 이걸 누가 믿겠나”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해서 대화와 평화를 추구하지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거기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군사 퍼레이드에 그것이 다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레드라인은 넘어도 한참 남았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日 스가 태도 몹시 실망”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에 역사문제 관련 요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올 연말 한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참석 조건으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조치,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겠다는 보증을 요구한

데 대해 “몹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은 동북아시아의 3개 책임국가 정상들이 머리를 맞대는 정례 대화로 올리는 한국이 주최할 차

레다”라며 “이번 회담은 코로나와 경제위기라는 세계의 당면과제를 극복하는 데 한·중·일 3개국이 함께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스가 일본 총리는 한일 간 역사 문제를 들어 불참 의사를 피력했다. 몹시 실망스럽다”며 “일본은 세계의 지도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스가 총리의 그런 태도가 지도국가에 어울리는 것인지 의문이다. 스가 총리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4대 폭력예방교육, 대학교 참여율 가장 낮아”

서동용 “법률 미비 때문” 지적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또한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하고 있지만 교수들과 학생들의 매년 교육 참여는 저조했다. 해당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추진결과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예방

교육 ‘종사자 참여율’은 성폭력 71.2%, 성희롱 72.3%, 성매매 69.8%, 가정폭력 69.7%에 머물렀다. 초중고등학교의 94.5%, 94.6%, 94.2%, 94%와 비교해 현저하게 낮았다.

대학의 경우 전임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고위직 참여율은 물론 비정규직, 신규자, 학생 참여율 모두가 낮았다. 대학교의 폭력예방교육이 낮은 이유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기관평가에 반영되는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성과를 저조해도 대학평가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4대 폭력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중 대학의 예방교육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은 ‘양성평등기본법’ 뿐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은 대학교 예방교육의 점검결과를 대학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서동용 의원은 “대학의 성폭력등 성비위 사건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은 제자리 걸음”이라며 “최소한 대학의 성폭력등의 예방교육을 강제할 법률 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